

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지역수용성 제고방안

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학과
오영석(oys@dongguk.ac.kr)
2015년 10월 28일(수)

목 차

1. 사용후핵연료 공론화: 내용과 교훈
2.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지역수용성

1-1. 원전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업개요

사업명칭

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의견수렴 지원용역

사업기간

2014. 12. 17 ~ 2015. 6. 16 (6개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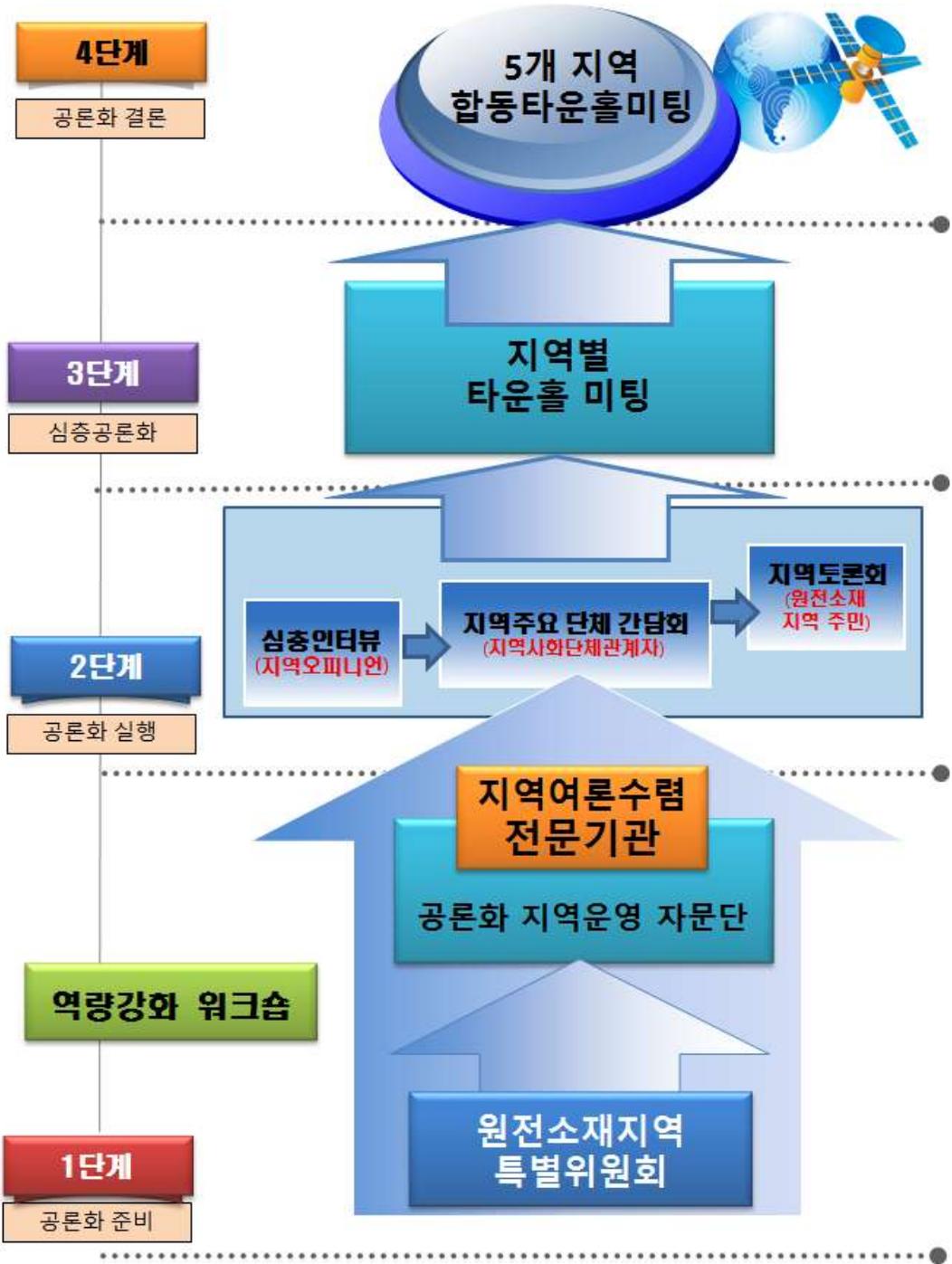
사업내용

심층인터뷰, 주민간담회, 타운홀미팅, 설문조사 등 총 17개 사업

추진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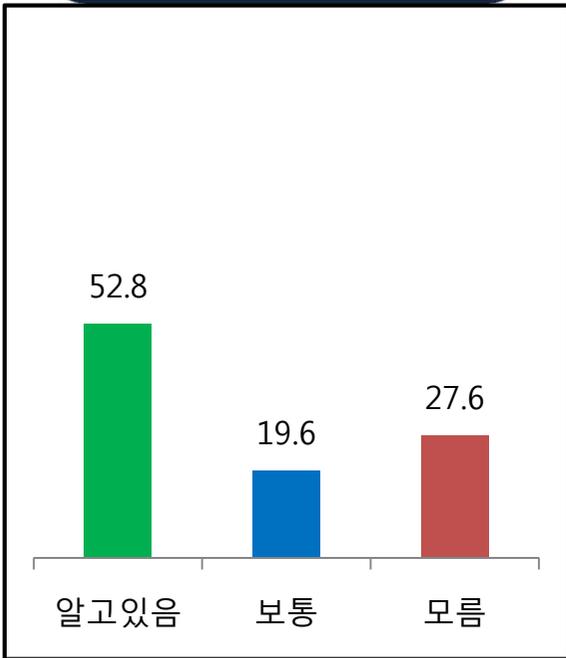
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, 의견수렴 전문기관, 운영자문단

공론화 절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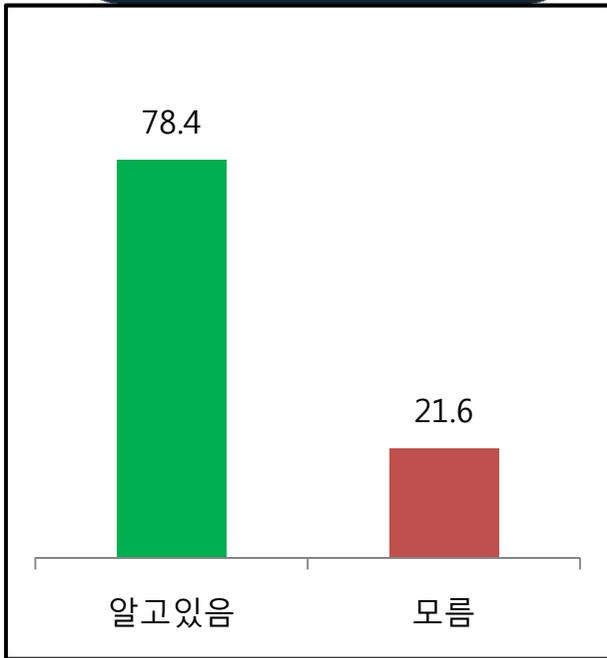


1-2. 사용후핵연료 인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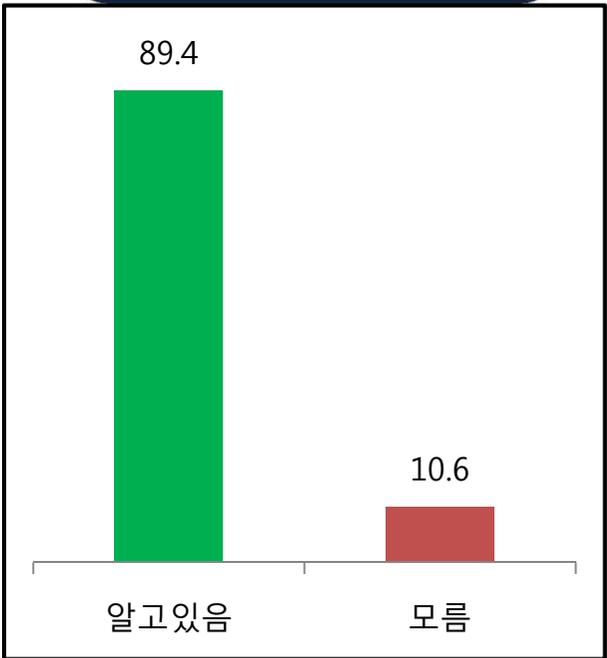
1차 설문조사
(지역주민 n=504명)



2차 설문조사
(지역주민 n=1700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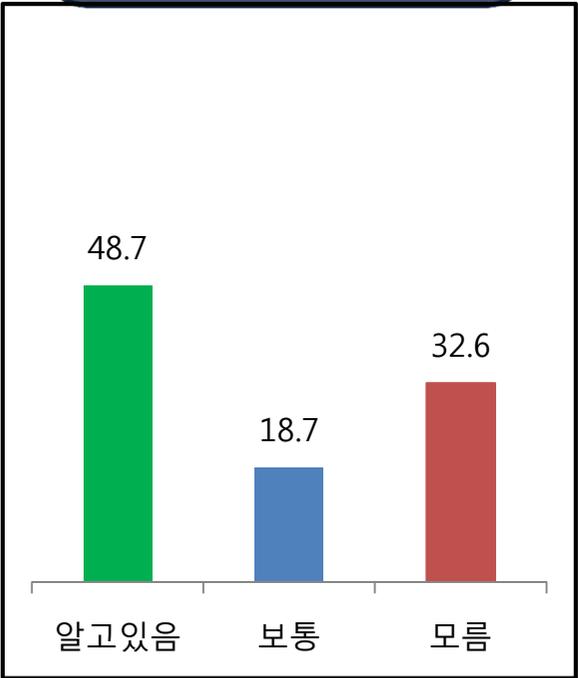


2차 설문조사
(주민간담회 참석주민 n=259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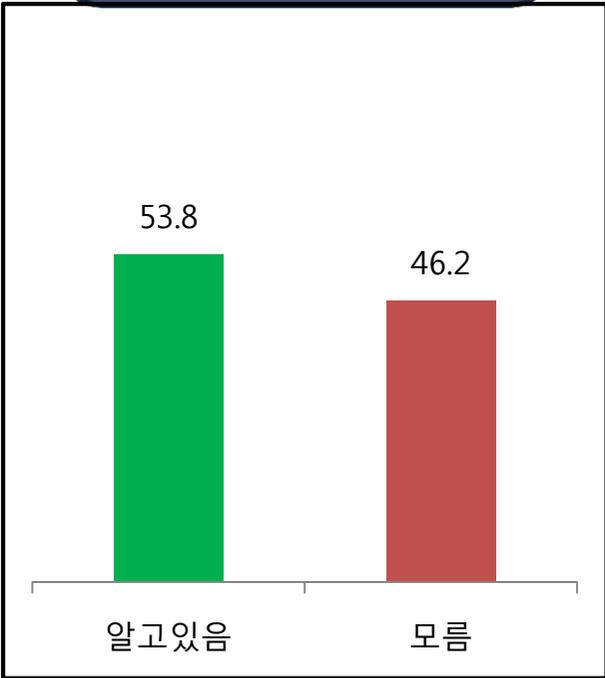


1-3. 사용후핵연료 포화 인지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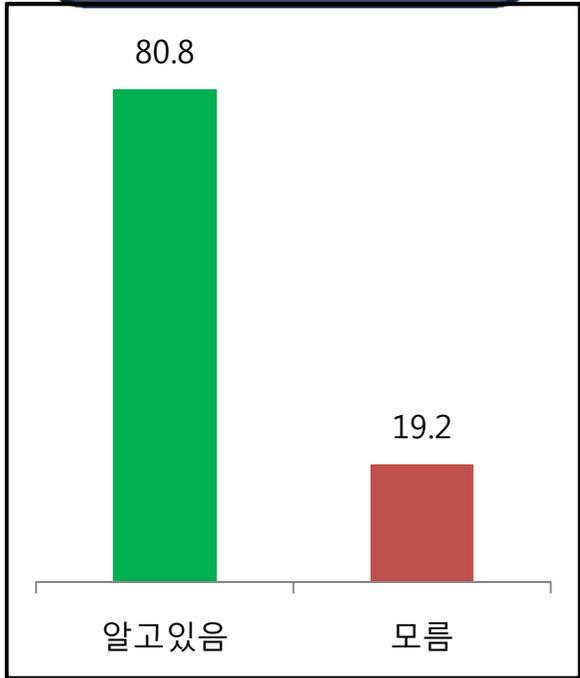
1차 설문조사
(지역주민 n=504명)



2차 설문조사
(지역주민 n=1700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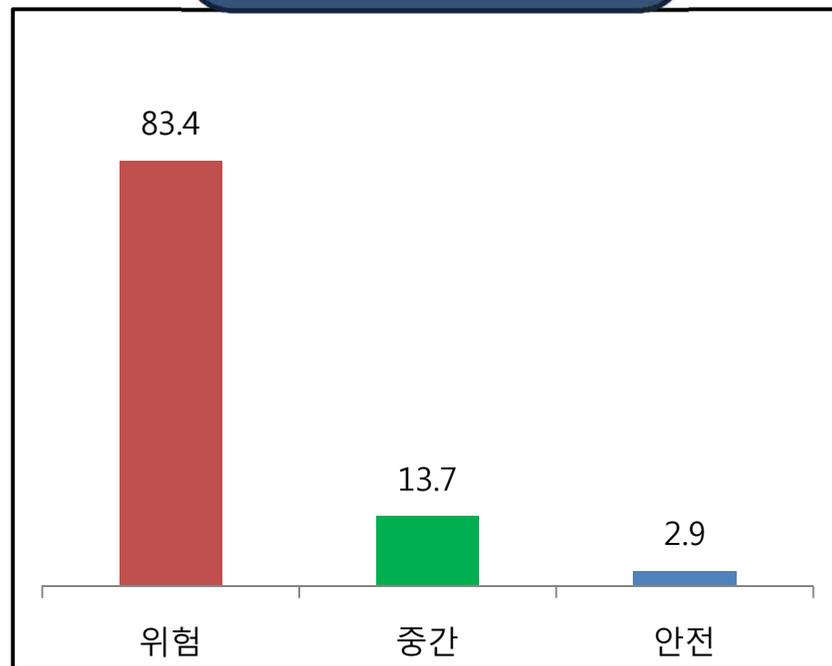


2차 설문조사
(주민간담회 참석주민 n=259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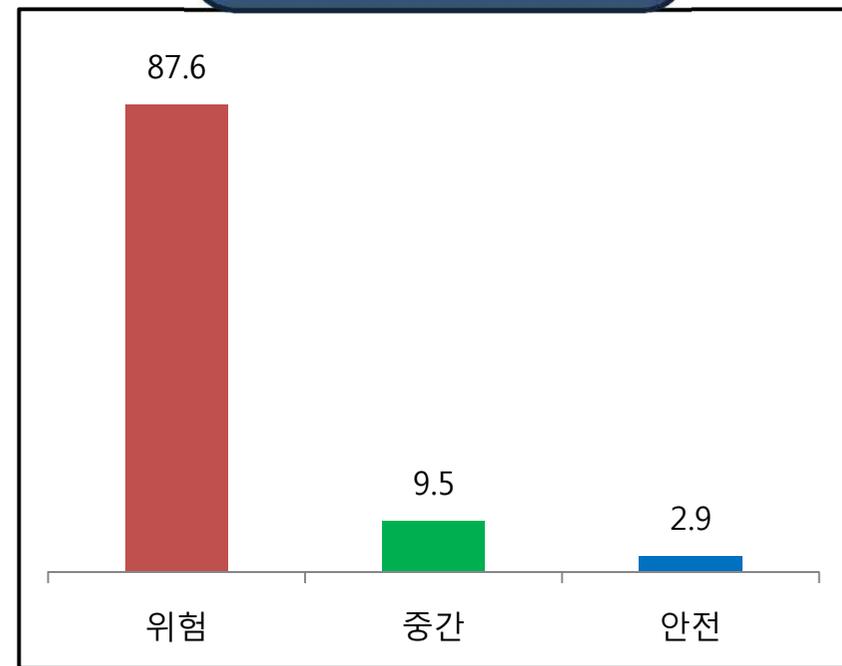


1-4. [2차 설문조사] 사용후핵연료 위험인식

지역주민 n=1700명



주민간담회 참석주민 n=259명



1-5.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종합의견

1

사용후핵연료 종합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

2

정부·주민 간 신뢰회복 방안의 강구

3

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 대상지역에서 원전소재지역의 제외

4

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

1-6. 경주지역 지역의견

	구분	선정이유	지역의견
내용 (주요의제)	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론화의 목적 실현 - 주민들의 높은 관심 	4개
	특별법 제18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들의 높은 관심 -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미래세대의 혼란 방지 	1개
	정부·주민간 신뢰 구축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들의 높은 관심 - 원전 관련 정책에 영향 	3개
	공론화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들의 높은 관심 - 공론화의 효과 증대 	2개
	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민주주의 실현 - 주민수용성 제고 	1개

1-7. [지역의견]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(1)

의견1

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의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정부입장의 재확인

[근거 및 이유]

- “경주에서 왜 공론화가 필요한가?” 공론화에 대한 의구심
- 특별법 제18조 ‘관련시설’에 대한 정부 입장 : 경주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을 건설하지 않음(2014년 9월 산업부 답변 1AA-1409-026123 등)

핵심주제

신뢰

1-8. [지역의견]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(2)

의견2

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건식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것. 반출이 이뤄질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 반출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

[근거 및 이유]

- 원자력위원회 제249차 의결(1989.9.30) 및 제253차 의결(2004.12.17)에서도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잡혀있었고, 이를 근거로 2005년 경주에 중·저준위방폐장이 유치되면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반출되는 것으로 홍보하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



1-9. [지역의견]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(3)

의견3

월성원전 내에 건식저장 중인 캐니스터와 맥스터의 명확한 성격규명과 저장기간의 구체적 명시

- [근거 및 이유]
- 정부는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저장이자 관계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'실질적인' 중간저장이자 관련시설로 간주. 이러한 인식차이는 정부와 주민 간 반복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
 - 주민의견과 사회통념이 반영된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의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사회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. 월성의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임시저장인지 중간저장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다수



1-10. [지역의견]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(4)

의견4

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사회갈등을 막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(가칭)사용후핵연료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

[근거 및 이유]

- 간담회와 타운홀미팅에서 지역 주민들은 공론화를 빌미로 임시저장의 장기화를 묵인하거나 발전소 내 분산중간저장시설을 추진할 것"이라는 우려 → 정부불신, 사회갈등
-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 조속히 영구처분장을 건설 주장. 단, 영구처분장 건설 전 까지 부지선정과 기술적 사항을 고려하여 소외 집중중간저장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
- 영구처분장과 소외 집중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전의 소내 중간저장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.

핵심주제

신뢰

1-11. [지역의견] 특별법 제18조

의견5

미래세대를 위하여 「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 '관련 시설'에 대한 법령정비 주문

[근거 및 이유]

- '관련 시설'에 대한 정의 부재 → 정부의 자의적 해석 개연성
- 주민들은 특별법 18조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지만, 오피니언리더들은 이를 인식. 정부가 특별법의 정확한 의미를 일반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정부는 경주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노력 요구

핵심주제

정보공개, 신뢰

1-12. [지역의견] 정부·주민 간 신뢰구축 방안(1)

의견6

정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청. 특히,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

[근거 및 이유]

-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속 주장
- 설문조사 및 간담회 분석결과 : '공론화 참여주민' 대 '공론화 미참여주민' 간 정보격차 큼. 간담회 참석주민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이해도와 관리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 제시 정도가 현저히 증가

핵심주제

소통, 신뢰

1-13. [지역의견] 정부·주민 간 신뢰구축 방안(2)

의견7

2005년 경주방폐장 유치 당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지원사업의 조기이행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

[근거 및 이유]

- 2005년 경주방폐장 유치 당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지원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. 정부불신의 한 원인.
- 유치 당시 약속한 약 3.4조 원 사업 중 현재 약 50%인 1.7조 원만 진행. 약속이행이 늦어지거나 이뤄질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만 보여도 정부와 주민 간 신뢰회복에 도움

핵심주제

지원사업, 신뢰

1-14. [지역의견] 정부·주민 간 신뢰구축 방안(3)

의견8

각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가 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신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

[근거 및 이유]

- 1989년 제정된 발주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지원제도에 주민불만이 많음.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및 일반회계로 전용. 사업선정 시 일부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구조라는 지적
- 동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에게 직접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부족. 심지어 사업 선정과 집행에 투명성이 부족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표출

핵심주제

지원사업, 신뢰

1-15. [지역의견] 공론화 활동(1)

의견9

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연장이 필요. 기간연장이 어려우면 이번 공론화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공개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

- [근거 및 이유]
-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여 이해하기 힘들 →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론화 ["현 지역 공론화 기간(6개월)의 충분성"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주민 응답자들(지역주민 52.2%, 간담회 참석주민 67.3%)이 '충분한지 않음'에 응답]
 -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와 교육이 필요. 원전소재 지역에서 (가칭)원자력환경아카데미의 운영 하는 것 등을 고려



1-16. [지역의견] 공론화 활동(2)

의견10

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및 정부의 '(가칭)사용후핵연료종합관리방안' 확정시까지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가 지역의견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필요

- [근거 및 이유]
- 공론화에 대한 의구심. 정부가 의견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세울 것이라는 주장
 - 따라서 특위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작성과 정부의 (가칭)사용후핵연료종합관리방안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견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



1-17. [지역의견] 절차

의견11

정부가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'(가칭)사용후핵연료종합관리방안'을 수립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최종관리방안을 확정하는 소통형 사업결정방식 요구

[근거 및 이유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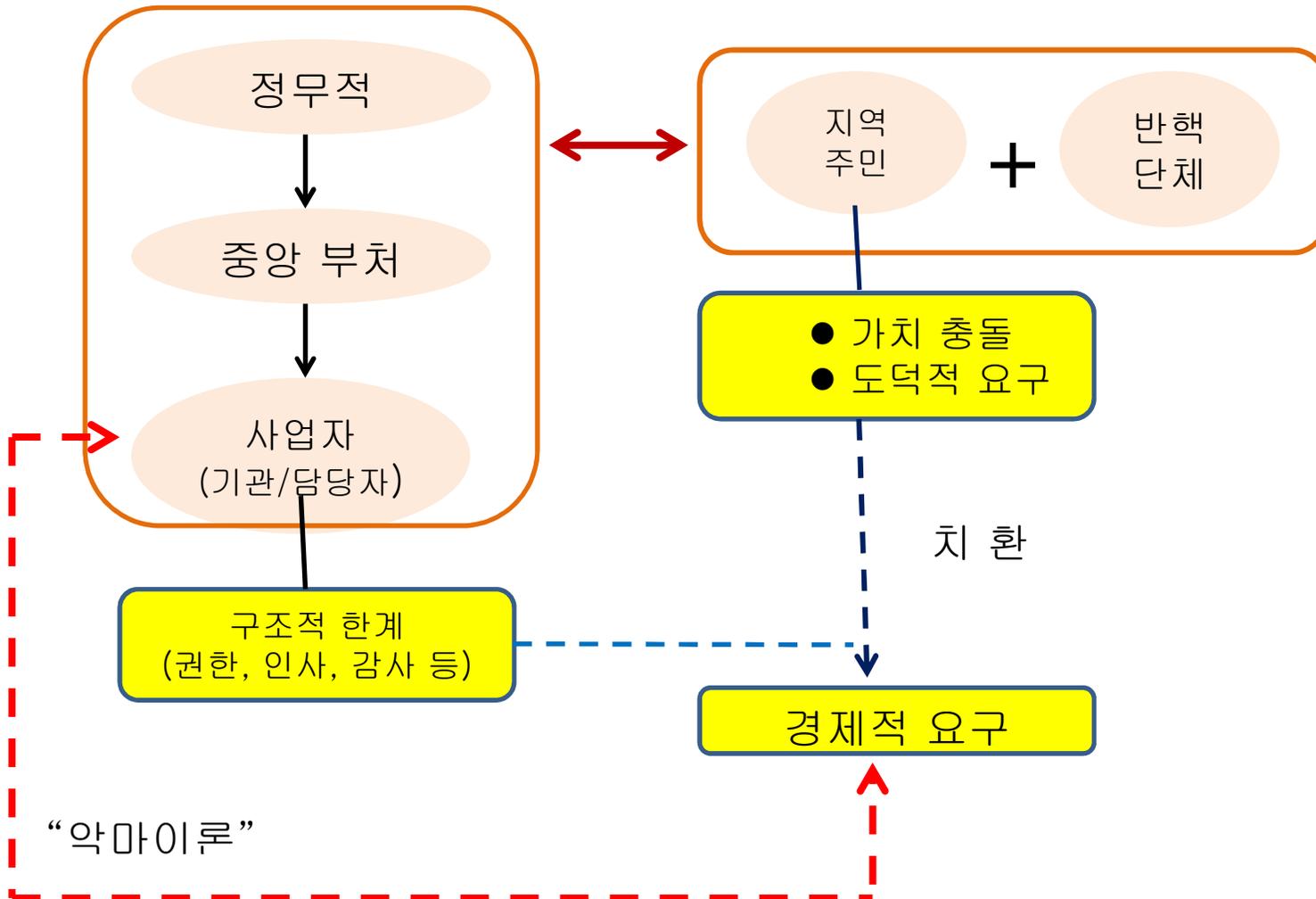
- 정부가 의견만 듣고 자기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절차가 필요. 정부가 주민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설득해야 함
- '성공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요인'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소통형 사업결정방식의 중요성 대변



1-18. 사용후핵연료종합관리 방안 수립절차

절차 구분	내용
공론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주지역 주민의견의 파악 -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
↓	
(가칭)사용후핵연료 종합관리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원칙의 표명('분리원칙' 등) - 영구처분장 로드맵 - 집중중간저장시설 로드맵 - 저장방식의 성격 및 기준 규명 -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포함
↓	
지역설명 및 수용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안의 설명과 필요시 설득 - 부지선정 방식과 조건 제시 - 지자체 거부권 부여 등의 포함
↓	
종합관리방안 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적인 정보공개와 주민홍보

2-1. 원전지역 갈등의 고착화



2-2. 원전지역 갈등의 주요원인

- 비용/편익구조의 불균형
- 기싸움(emotional power game)

2-3.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지역수용성 제고방안

필요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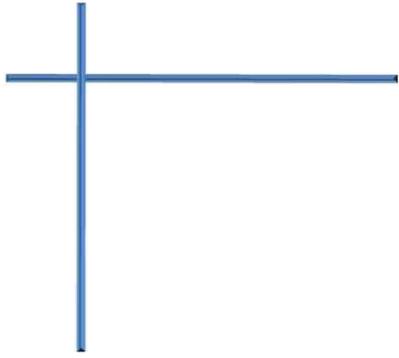
- “참여와 공개” 원칙의 발표와 시행
- 이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함.

매개변수

- “신뢰” 구축사업의 시행
- 과거정책으로부터 형성된 낙인효과의 제거

충분조건

- 위험인식을 낮춰야 함(기술안전성 담보 후). 이후,
- 소득증대 등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것임.



감사합니다

